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17.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차 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 지진대비 대책을 마련할 것 1
2. 대학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 확충방안을 수립하고, 안전관리담당직원 배치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대학들과의 협의를 위한 계획도 수립할 것 1
3. 각 대학의 운동부특기자에 대한 성적관리 학칙과 관련하여 학점관련 학칙 개정을 소급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것 1
4. 대학이 자율적,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학칙들을 정비해 나가도록 대교협이 역할을 수행할 것 · 1
5. 최근 3년간 학과 통폐합이 빈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 수렴 부족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 2
6. 대학은 취업학원이 아니므로 대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부에 의견을 개진할 것 · 3
7. 대학 재정투명성 확대를 위하여 대학의 재정 집행 정보에 대한 공개 수준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것 3
8. 고교대학 연계심화과정(UP) 제도가 있으나 선행학습금지법에 의해 실효성이 없는 제도가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제도의 선전·광고 문제를 해결할 것 4
9. 민원의 소지가 있는 대학별 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력관리와 철저한 공증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10. 수시모집 기간에 대학공통원서접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였는데, 재발을 방지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5
11. 대입공통원서접수시스템의 전담 기관으로서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전국적인 혼란 상태를 대비하여 원서접수대행사와 함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매뉴얼뿐만 아니라 비상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대비훈련도 시행할 것 6
12. 학교 현장의 취업계 관행이 있었으나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으므로 취업 준비중인 학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대처가 필요하며, 대학별로 상이한 취업 학점 인정 여부로 인해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6
13. 학생부종합평가 관련 운영 자기소개서 대필, 대부분의 입학사정관의 80%가 위촉사정관으로 전문성 부족, 교사의 부담 및 컨설팅학원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운영을 개선할 것 7
14. 대학에서의 입학사정관에 대한 직무능력이나 도덕성에 대한 평가기준 및 검증 절차를 강화할 것 8
15.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학생의 학자금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대교협, 전문대교협, 한국장학재단이 협의하여 해당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 9

16. 대학들의 정보공시와 관련하여 오류공시, 허위, 과장광고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문제를 발생시킨 대학에는 패널티를 강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0
17.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학들에 대한 사후평가가 매우 미비한 상황이므로, 최초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사후평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0
18. 대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3가지 사항, 즉 대학등록금 카드결제, 입학금 현실화, 졸업유예생 지원에 대하여 검토할 것 11
19. 학령인구감소, 대학구조조정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대교협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립대 총장 직선제, 대학구조개혁 문제 등에서 대학을 대표하는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 13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1. 지진대비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가. 시정·처리결과 1) 처리내용 없음 나. 향후 추진계획 1) 유관기관 벤치마킹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지진 대비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 예정
	2. 대학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 확충방안을 수립하고, 안전관리담당직원 배치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대학들과의 협의를 위한 계획도 수립할 것(추진중)	가. 시정·처리결과 1) 처리내용 없음 나. 향후 추진계획 1) 교육부 담당부서(학교안전총괄과 등)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 개선방안 수립 2) 대학의 안전관리 담당자들과 체계적인 네트워크 형성 방안 수립
	3. 각 대학의 운동부특기자에 대한 성적관리 학칙과 관련하여 학점관련 학칙 개정을 소급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것(완료)	가. 시정·처리결과 1) 각 대학의 운동부특기자에 대한 성적관리 학칙과 학점에 대한 학칙 개정 후, 개정된 학칙을 소급한 적용사례를 검토한 결과 질의하신 대학을 제외한 타 대학의 사례는 없음을 확인하였음
	4. 대학이 자율적,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학칙들을 정비해 나가도록 대교협이 역할을 수행할 것(추진중)	가. 시정·처리결과 1) 학칙 정비에 대한 인식 공유 ○ 대학에서의 학칙 정비는 현재 고등교육법시행령(제4조제3항 등)에 따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의 사전 공고, 심의, 공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도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록 하는 체계와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p> <p>나. 향후 추진계획</p> <p>1) 학칙 정비에 대한 인식 공유 지속적으로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이 자율적,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학칙 개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인식 공유를 지속적으로 추진
	<p>5. 최근 3년간 학과 통폐합이 빈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 수렴 부족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추진 중)</p>	<p>가. 시정·처리결과</p> <p>1)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인식 공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령인구감소, 재정지원사업 등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에 대해서는 학생대표 등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교내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와 절차를 갖추고 있음 <p>나. 향후 추진계획</p> <p>1)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인식 공유 지속적으로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의견수렴과 관련해서는 대학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학이 자율적, 민주적 절차를 통해 대학구조 개혁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 - 교무처장협의회, 기획처장협의회 등 직능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러한 인식이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6. 대학은 취업학원이 아니므로 대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부에 의견을 개진할 것(추진중)</p>	<p>가. 시정·처리결과</p> <p>1)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 지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총장세미나, 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하여 인재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 - 대학발전을 위한 과제('16.3.23) - 대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건의('16.6.23) -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의견 제출('16.11.9) <p>나. 향후 추진계획</p> <p>1) 대학의 특성, 자율성 존중을 위한 노력 지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 및 대안 제시를 통하여 정부와 더불어 대학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 대학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대학발전시스템의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으로 건의
	<p>7. 대학 재정투명성 확대를 위하여 대학의 재정 집행 정보에 대한 공개 수준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p>	<p>가. 시정·처리결과</p> <p>1) 대학재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 공개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대학알리미를 통해 국공립대학, 사립대학의 예결산 자료뿐만 아니라 법인의 예결산 자료 등 다양한 재정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음 - 예산은 6월, 결산은 8월에 공시하고 있음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나. 향후 추진계획</p> <p>1) 대학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 지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대학의 경우,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KORUS)을 2017년에 구축 예정임 ○ 사립대학의 경우, 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예·결산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 지속
	<p>8. 고교대학 연계심화과정(UP) 제도가 있으나 선형학습금지법에 의해 실효성이 없는 제도가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제도의 선전·광고 문제를 해결할 것(추진중)</p>	<p>가. 시정·처리결과</p> <p>1) 기존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기재되었으나 2016년부터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된 경우에만 기재하게 되어 사실상 기재 불가로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P 홈페이지 안내 및 교육청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변경 사항을 고교 교사 및 학생에게 충분히 안내 ○ UP 홍보자료(리플릿, 포스터, 브로슈어)를 고교에 직접 발송하여 안내 <p>2) 2016년 사업의 보완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10월) 신규 협약대학(서강대, 대신대, 중부대, 총신대) ○ 겨울방학 및 특별학기 운영(7개교, 17개 교과, 198명 수강 신청) ○ 사회적 배려 대상 및 과정 이수 학생 수강료(20만원) 지원 <p>나. 향후 추진계획</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제도 유지를 위한 향후 사업 방향 마련 중(교육부와 협의) ○ 특별학기 운영 확대, 표준교육과정 추가 개설·운영, 고교 방과후학교 활동 운영 등 ○ 중장기적 관점에서 적절한 자원 확보,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마련 필요
	9. 민원의 소지가 있는 대학별 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력관리와 철저한 공증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추진 중)	가. 시정·처리결과 1) 대학별 원서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접속정보, 수행이력 등을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음 2) 대학별 지원 사항을 전자문서로 생성하고 있으며, 자기소개서는 PDF로 생성 보관하고 있음 나. 향후 추진계획 1) 대입원서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에 대한 전자문서 존재성 및 진본확인 등 법적증거력(타임스탬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 및 체계를 마련 검토 예정
	10. 수시모집 기간에 대 학공통원서접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였는데, 재발을 방지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 중)	가. 시정·처리결과 1) 원서접수 대행사에서 장애 발생 정보 자원을 증설함('16.9) 2) 2017학년도 정시모집 대비 장애 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함('16.12) 3) 2017학년도 정시모집 대비 종합 점검 및 장애 대응 체계(T/F)를 운영함('16.12) 4) 시스템(행정포함) 장애 대응 매뉴얼을 보완함('16.12)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나. 향후 추진계획</p> <p>1) 2018학년도 원서접수 대비 통합테스트, 시험운영, 종합점검, 장애 대응 모의 훈련, 장애 대응 체계(T/F)운영 진행 예정('17.4~6)</p>
	<p>11. 대입공통원서접수시스템의 전담 기관으로서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전국적인 혼란 상태를 대비하여 원서접수대행사와 함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매뉴얼뿐만 아니라 비상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대비훈련도 시행할 것(추진중)</p>	<p>가. 시정·처리결과</p> <p>1) 원서접수 대행사에서 장애 발생 정보 자원을 증설함('16.9)</p> <p>2) 2017학년도 정시모집 대비 장애 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함('16.12)</p> <p>3) 2017학년도 정시모집 대비 종합 점검 및 장애 대응 체계(T/F)를 운영함('16.12)</p> <p>4) 시스템(행정포함) 장애 대응 매뉴얼을 보완함('16.12)</p> <p>나. 향후 추진계획</p> <p>1) 2018학년도 원서접수 대비 통합테스트, 시험운영, 종합점검, 장애 대응 모의훈련, 장애 대응 체계(T/F)운영 진행 예정('17.4~6)</p>
	<p>12. 학교 현장의 취업계관행이 있었으나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으므로 취업 준비중인 학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대처가 필요하며, 대학별로 상이한 취업 학점 인정 여부로 인해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p>	<p>가. 시정·처리결과</p> <p>1) 조기취업자 관련 대응방안 모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조기취업자 대응방안 마련이 요청되어 대학에 개선 방안 안내하고, 교육부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하여 협조 요청('16.9.23) - 대학과 학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교무처장협의회와의 학칙 개정, 제도 개선, 다양한 방안 모색 등 실무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마련할 것(추진중)</p>	<p>협의('16.10.5)</p> <p>2) 학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제도개선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및 대교협에서 요청한 학사 관련 규제개선 건의를 수용하여 제도개선 추진 - 교육부에서 학사제도 유연화 방안을 통해 모듈형 학기,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기취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개선 추진('16.12.9)
	<p>13. 학생부종합평가 관련 운영 자기소개서 대필, 대부분의 입학사정관의 80%가 위촉사정관으로 전문성 부족, 교사의 부담 및 컨설팅 학원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운영을 개선할 것(추진중)</p>	<p>가. 시정·처리결과</p> <p>1) 유사도 검증 기본방향 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은 유사도 검증을 담당하는 전임사정관을 1명 이상 확보하며, 학생부와 지원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비교·대조 ○ 대학은 유사도 검증 결과를 반드시 평가에 반영하고, 유사도 검증 기준 및 처리절차를 모집요강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 ○ 자기소개서 대필 검증 : 시스템을 통한 대필 확인은 불가하지만 입학사정관의 서류평가 전문성과 면접과정에서 자기소개서 대필을 확인 <p>2) 위촉사정관 대상 직무연수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촉사정관 연수(2회, 각 23시간) 실시 ○ 교육내용 - 교육 정책의 이해(4), 고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등학교 교육의 이해(8), 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 및 실제(8), 윤리적 책임과 제도적 소양(3)</p> <p>나. 향후 추진계획</p> <p>1) 유사도검증 가이드라인 보완을 통한 유사도 검증 의무화 및 절차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소개서 대필 확인을 위한 입학사정관 전문성 강화 ○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활용하고 있는 모든 대학이 유사도 검색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전형 종료 후 합격자의 지원서류 재검증 의무화 <p>2) 입학사정관(위촉사정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시간 준수(현장점검 및 컨설팅 시) 확인 ○ 입학사정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대교협 고등교육연수원 운영) 확대 실시
	<p>14. 대학에서의 입학사정관에 대한 직무능력이나 도덕성에 대한 평가기준 및 검증 절차를 강화할 것(추진중)</p>	<p>가. 시정·처리결과</p> <p>1) 입학사정관 윤리강령 배포 및 서약식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대상 윤리강령 배포 ○ 대학별 윤리교육 강화 및 윤리서약식 실시 권장 <p>2) 입학사정관 전문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사정관 평가 전문성을 위한 교육훈련 시간 기준 제시 - 전임사정관(채용/전환/교수 사정관)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120시간(누적)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후 학생선발 평가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 이후에는 대입제도 및 고교 교육과정의 변화 등에 대한 추가적 학습을 위한 매년 40시간 이상의 계속교육 권장</p> <p>- 위촉사정관 : 학생 선발에 참여하는 최초 연도에 30시간 이상 교육 이수 권장. 이후에는 매년 15시간 이상의 계속 교육 권장</p> <p>나. 향후 추진계획</p> <p>1) 입학사정관 직무윤리 연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사정관 직무윤리 연수 개최 - 입학사정관 윤리의식 제고, 부정청탁 방지법 이해, 학생부기록 개선방안 등
	<p>15.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학생의 학자금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대교협, 전문대교협, 한국장학재단이 협의하여 해당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추진중)</p>	<p>가. 시정·처리결과</p> <p>1)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개선 건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학생수 감축이 아닌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별 발전전략 및 상황에 맞는 개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요청 - 국회 교문위, 교육부 등에 지속 건의 -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부에 제출('16. 11.) <p>나. 향후 추진계획</p> <p>1) 기관평가인증을 토대로 한 대학구조개혁 추진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에 근거한 2주기 구조개혁평가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추진과 기관평가인증 결과를 구조 개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으로 2018년 하반기 추진을 계속적으로 건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정원 감축, 행·재정적 지원여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 퇴출 등의 구조개혁 조치는 반드시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요청
	<p>16. 대학들의 정보공시와 관련하여 오류공시, 허위, 과장광고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문제를 발생시킨 대학에는 패널티를 강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p>	<p>가. 시정·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오류공시, 허위, 과장광고 등에 대해서는 사이버 신고센터(대학알리미) 및 현장신고센터(공시센터) 등을 운영(정정이력 공개)하고, 주기적인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엄정 대처하고 있음 * '16년 167개교 527건 적발·시정조치 및 벌점부과 ○ 또한, 누적벌점이 높은 대학에는 패널티를 부과하기 위하여 기관주의, 기관경고와 더불어 공시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7개교)을 실시함 <p>나.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관리·운영
	<p>17.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학들에 대한 사후평가가 매우 미비한 상황이므로, 최초</p>	<p>가. 시정·처리결과</p> <p>1) 수시 및 정시 모집요강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모집요강 검토(8월~9월) : 사업 선정대학(60교) 대상 사업계획서 대비 수시 전형별 계획 및 내용 준수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사후평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p>	<p>여부, 점검 결과 6개 대학 주의 및 경고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시모집요강 검토(11월~12월) : 사업 선정대학(60교) 대상 사업계획서 대비 정시 전형별 계획 및 내용 준수여부, 점검 결과 정리 중 <p>2)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컨설팅(8월, 41교) : 대입전형 운영 계획(대학별 고사 실시 계획 포함), 대입전형 운영 여건, 공동사업 운영 계획 등 ○ 2차 컨설팅(12월, 19교) : 대입전형 계획 대비 운영 현황, 대입전형 운영 여건, 사업 운영 실적 및 예산 집행 적절성 <p>나. 향후 추진계획</p> <p>1) 중간 평가를 통해 선정대학(60교) 중 10교 내외 지원 중단('17.4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입전형 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 사업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속 지원 중단
	<p>18. 대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3가지 사항, 즉 대학등록금 카드결제, 입학금 현실화, 졸업유예생 지원에 대하여 검토할 것(추진중)</p>	<p>가. 시정·처리결과</p> <p>1)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 졸업유예생 지원 등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카드납부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 부담, 할부이자 부담 및 학생의 신용유의 우려 등의 문제로 카드납부 대신 분할납부제 개선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납부 근거 마련(고등교육법 제 11조, '16.12.20.) ○ 졸업유예생에 대해서는 학위수여 유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에 제도화를 통해 졸업 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칙 규정을 둘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함(고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예 학생은 각종 정보공시 지표의 재학생 모수에서 제외하고, 취업률 산출시 졸업생 수 모수에서도 제외하도록 개선('16.12.9) <p>나. 향후 추진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 노력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납부가 학생 및 대학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방안이긴 하지만 카드납부에 따른 대학의 가맹점수수료 및 학생의 할부수수료 경감 방안 모색 - 금융당국, 국회 등 협조 요청 2) 대학 입학금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금 관련 논의는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학재정여건을 악화시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책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등심위 활성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하여 관리하도록 노력 3) 졸업유예생 관련 모니터링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유예생 지원과 관련한 대학 운영 상황 모니터링 및 관련 직능단체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9. 학령인구감소, 대학 구조조정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대교협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립대 총장 직선제, 대학구조개혁 문제 등에서 대학을 대표하는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추진중)</p>	<p>와의 협의 추진</p> <p>가. 시정·처리결과</p> <p>1) 대학 자율성 존중에 대한 의견 전달 ○ 대교협 회장단 간담회, 국공립대총장협의회 회의,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의, 부총리 간담회 등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하여 대학 특성과 환경에 적합한 체제가 반영될 수 있는 총장선거제도, 대학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함을 전달해 옴</p> <p>-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부에 제출 ('16. 11.)</p> <p>나. 향후 추진계획</p> <p>1) 설립취지와 기능에 맞도록 협의체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노력 지속</p> <p>-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 및 대안 제시를 통하여 정부와 더불어 대학발전의 한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p>